

여야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 이견

시기농고野 “조국 논란 정리된 이후” vs 與 “조국과 무관하게 따로”

文의장 “정치 실종 놔두면 직무유기...국회는 국회답게 검찰은 검찰답게”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정실에서 회동을 갖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여야가 지난달 30일 국회의원 자녀 입시특혜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조사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특별감찰관은 향후 고위공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들은 전수조사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야당 원내대표들은 “시기적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논란이 정리된 이후에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고 이 원내대표는 “조 장관 의혹과 무관하게 따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았다. 회동에 동석한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된 것”이라며 “방법과 시기, 범위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았고 입장이 달라 이야기를 하다가 마무리가 됐다”고 전했다. 또한 이날 회동에서 야당 원내대표들은 민주당에 조속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도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이 3년 동안 공석”이라며 “문재인정권에서 특별감찰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비위가 일어나고 있어 하루빨리 임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도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특별감찰관은 향후 고위공

직지범죄수사처와 별개로 논의되면 된다”며 “조국 사태를 통해 반드시 정상화를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춘숙 원내대표는 “우리 당이나 청와대가 의도적으로 (특별감찰관 임명) 미루는 것이 아니라 추천 방식 변경이 합의가 안 돼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의장은 이날 회동에서 여야 원내지도부에 “세계를 보고 점진하는 시기에 우리 정치가 우물 안 개구리가 돼 정파적 싸움에 연연하면 안된다”며 “지금은 누구 탓을 할 때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고 한민수 국회대변인이 전했다. 문 의장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국내·외 불안 요소를 언급한 후 “우리 정치가 실종돼 있는데 지금처럼 놔두면 정치권은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또 “하반기 20대 국회는 최악으로, 누구를 탓해서 안 되고 서로 네 책임이라고 주장하거나 비난해서 안된다”며 “국회는 국회답게 검찰은 검찰답게 할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윤호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퇴진과, 변혁 ‘발족’ · 당권과 ‘흔들’ · 안철수 ‘시동’ ‘사면초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바른미래당 당권과 퇴진파의 내용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퇴진파 의원들이 정식 회의체 모습을 갖추고, 당권과 내에서도 손학규 대표 사퇴 촉구 목소리가 나오면서 손 대표의 사면초가에 놓이는 모습이다. 바른미래당 퇴진파는 지난달 30일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이라는 이름으로 퇴진파 의원들의 모임을 발족시켰다. 단순히 유승민·안철수계로만 분류하던 것을 넘어 공식적인 이름을 달고 활동에 나선 것이다. 김해빈 전국대학생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바른미래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전대위가 어떻게 비칠지 생각해본다. 저희는 깊은 고민 끝에 슬프고 참담한 마음으로 사퇴를 결심했다”며 “대표님께서 과감한 결단과 결기를 내려주셔서 우리 당이 굳건하게 바로 설 수 있도록 힘을 보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또 이날 최고위원회의에는 “지명직” 최고위원인 문병호 최고위원도 불참했다. 이 역시 손 대표 리더십이 흔들리는 것으로 해석된다. 손 대표를 둘러싼 사퇴 촉구는 퇴진파뿐만 아니라 당권파에

속한 당내 호남계 의원들은 앞서 당내 의원들에게 비상대책위원회를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호남계 의원들 역시 손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당내 대학생 조직도 손 대표를 향해 사퇴 촉구 목소리를 내놨다. 김해빈 전국대학생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바른미래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전대위가 어떻게 비칠지 생각해본다. 저희는 깊은 고민 끝에 슬프고 참담한 마음으로 사퇴를 결심했다”며 “대표님께서 과감한 결단과 결기를 내려주셔서 우리 당이 굳건하게 바로 설 수 있도록 힘을 보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또 이날 최고위원회의에는 “지명직” 최고위원인 문병호 최고위원도 불참했다. 이 역시 손 대표 리더십이 흔들리는 것으로 해석된다. 손 대표를 둘러싼 사퇴 촉구는 퇴진파뿐만 아니라 당권파에

文대통령 “윤석열 총장, 檢개혁안 속히 마련해 제시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35분 동안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검찰 개혁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 뒤 “따라서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 27일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전한 검찰 개혁 언급에 이어 사흘 만에 다시 한번 검찰 개혁에 대해 강조한 것으로,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거명하며 ‘조속한 검찰개혁안 마련’을 지시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날 업무보고는 문 대통령이 지난 27일 보고를 받았다는 뜻을 밝히면서 마련된 수사 업무보고로,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 방안’에 대해 보고가 이뤄졌다. 고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매우 높다”며 “우리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에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법무부 장관이 보고한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의 개정 등은 모두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들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당장 그 내용을 확정하고 추진

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따라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와 검찰개혁단 등을 통해 검찰 구성원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내용을 보완하여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검찰 개혁에 관하여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개혁의 주체이고, 또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법 제도의 개혁에 관하여는 법무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조국 장관을 비롯해 김오수 차관, 이성윤 검찰국장, 황희석 검찰개혁추진단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오전 청와대 여인관 소회의실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발언하고 있다.

배석했다. 검찰총장이 배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 관계자는 “배석자 구성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다”며 “법무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장관이 와서 보고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1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분 한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민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광고 직통 ☎ 062)224-5800
팩 스 222-5547

상속한정승인공고
사 건 번 호 : 광주가정법원 2019년 단 3381 상속한정승인
사 망 자 : 조 윤 원 (1961년 06월 22일생)
최 후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서림로100번길 12-5(임동)
2018.05.10. 피상속인 망 조윤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 있어, 상속인들은 민법 제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19년 10월 1일
공 고 인 : 박선옥, 박초희, 박종민.
한정승인수리일 : 2019년 9월 26일
공고기간 : 2019. 10. 1 ~ 2019. 12. 1
신 고 처 : 박선옥 010-5864-4472

호남신문 공익 캠페인
“**딱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입니다**”
한 잔만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날 과음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사람은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다 함께 약속해 주세요.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원청의 안전 보강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 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정시간근로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

노·사 간에 갈등이 있나요?
- 전담에는 노사민정 세력조정 제도가 있습니다.
- 노사간 서로 생경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무료 지원해 드립니다.
- 임금, 퇴직금, 해고, 산재 단체교섭 노조활동, 노동문제로 애로사항이 있는 개인이나 기업, 노동조합 등 누구든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상담전화 062) 524-9666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전라남도노사갈등조정결실위원회